



진리
평화
창조

오대학보

발행인	이강희
편집인	김영희
편집장	이영환
인쇄인	김영수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593호 1992년 11월 17일 (화)
제3종 우편물 (7) 급인가

서울, 학생·학교측 7개항 조인으로 수업재개

학교발전을 위한 합의 사항

1. 캠퍼스 환경에 대해
1) 자곡동 그린벨트 해제 추진위원회를 92년 11월 말까지 구성한다.
2. 구성원은 학교당국 2인, 교수 4인, 학생 4인, 직원 2인, 동문 2인, 학부모 2인으로 하며, 구성원 선임은 학부모를 제외한 학교,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직원, 동문회에서 한다. (단, 학부모는 학교당국과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3. 권한: ①추진위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추진위는 그린벨트 해제 후 자곡동 부지의 사용방안 결정에 부지사용여부 포함을 결정한다. ②추진위는 특별기구로 내규와 한다. ③추진위는 특별기구로 내규와 한다. ④추진위는 특별기구로 내규와 한다. ⑤추진위는 특별기구로 내규와 한다.
4. 부지 사용방안 결정시 학생대표는 전체 학생의 찬반투표를 거쳐 추진위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5. 추진위는 중, 장기발전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
6. 현 이문캠퍼스의 지속적인 면적 확대를 통해 새 건물을 신축하고 구 건물의 현대화(스틸 내외부의 장식, 조명 등)를 추진하여 각종 조정사업을 한다. 이의 구체화는 중·장기 발전위원회의 계획을 통해 93년 상반기부터 96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한다.
7. 장기적으로 분과 계열 재조정을 통하여 서울은 인문캠퍼스로, 용인은 이공계 캠퍼스로 특화발전시켜

- 나간다.
3. 해결한 공과는 서울시내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며, 총학생회가 요구할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의 최종확정된 해결안 자료를 즉시 공개한다.
4. 동원당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문제점을 개회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추진하며, 의대와 부속병원 '상설추진위원회'를 93년 상반기에 구성, 그 구체적인 계획안을 95년까지 마련하고 96년부터 그 실행을 본격화한다.
5. 의대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의 부분은 별첨 1 참조
6. 단기화지사업은 별첨 2 참조
7. 위 사항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 학생의 찬반투표를 거쳐) 총학생회와 협의한다.

안이라는 이번 대학당국과의 조출안이 구체성이 결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재단이 합의한 내용을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 지대하여 '재단 건전'은 일정정도 한계성을 보였다. 이 조출안은 95년까지 마련하고 96년부터 그 실행을 본격화한다.

합의안의 취사성

구체적인 합의안의 내용은 있어서는 '자곡동 그린벨트 해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92년 11월 말까지 구성한다 고 되어있었다. 구성원 선임과정의 어려움과 각 구성원 주제별간의 모순관념이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또한 구성원의 성향 및 의견 조율에 있어서는 전도 간헐해서는 안될 부분이므로 총학생회의 이후 책임성이 분산되는 것을 우려한다.

'재단'에 대한 조항에 있어서는 '자곡동 부지의 사용방안'을 문과와 하는 데 있어 '캠퍼스 부지사용 여

다. 특히 학원변경시에는 교육부로부터 승인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학원으로의 명확한 사업이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른 대학의 사례에서처럼 학내에서 특화기구를 신설할 경우에도 교육부의 승인이 없이 대외적인 공식 지위를 갖지 못한 점과 이러한 기구 및 구성원에 대한 신분보장이 해석에 따라 용이해진다. 이는 재단에서 지적되는 부분이다.

2항의 각 캠퍼스별 특화발전부분은 용인캠퍼스 기총학생회의 동의가 없었는 점이 문제화될 소지가 있다고 있다. 전체 합의안을 통해 학생측은 4명이 추진위와 발전계획위원회에 참가, 서울·용인 캠퍼스 각각 2명의 대표가 참가한다고 서울 학생측 학총학생측은 설명하고 있다. 이전에 용인캠퍼스의 총학생회 의의견을 통해야 했다는 것이 혼란이다. 이는 의대와 부속병원의 설립에 있어서는 이공계열은 용인캠퍼스에 특화발전시킨다는 문구의 유권해석을 통해 입장정리를 할 경우 대학당국, 서울캠퍼스 학생측 대표의 결정사항이므로 용인캠퍼스 학생측과 강경대응을 불러 올 여지를 안고 있다.

앞으로의 해결과제

이번 합의안 조출은 그 내용의 구체성을 떠나 어찌됐든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틀입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생을 포함한 학내 제후들의 자치적인 '심의'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21일간의 전전 설거지라는 '심의'수준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총학생회의 다음 연도를 책임질 총학생회측의 이해의 성과물을 어느정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재평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추세를 이해하면 다음 연도 총학생회선거를 치른다는 입장도 유세하다. 이러한 가운데 아직까지 대학당국, 재단을 상대로한 학자적의 중저투를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현 총학생회가 어느 정도에 추진력을 가지고 12월 말까지 사업을 집행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 총학생회는 꼭꼭은 학내/외부를 조종하고 학생측 학자적의 추진력 및 기총학생회측을 얼마나 강력히 조직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학자적 이행여부와 지속적인 학자적의 성숙도는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חק보>

외대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 위상에 관하여

1. 외대 중·장기 발전계획위원회(이하 '발전계획위원회')의 성격 발전계획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중장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계획기구로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위원회의 하위보조기구 및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계획위원회의 두개의 위원회를 갖는다.
2. 구성
위원장: 총장
계획위원회의: 학교 차장, 전문위원
계획위원회의: 교수4인, 학생 4인, 직원 4인, 동문 2인, 학부모 2인, 외대발전위원회 2인
3. 권한
가. 계획위원회의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및 최종안을 작성한다. 이를 계획위원회의에 회부한다.
나. 계획위원회의는 계획위원회의 최종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며 최종안에 대한 심의권을 가진다.
4. 발전계획 확정 과정
가. 계획위원회의는 외대 중·장기 발전계획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중·장기 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을 심의하며 최종안을 마련한다.
나. 계획위원회의는 회의 최종안을 심의 확정한다.
다. 계획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은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확정한다.
5. 제도와
회의 기구를 학교발전계획에 관한 특별기구로 내규화한다.

단기사업

1. 도서관과 관련하여
—도서관 육성은 건국초기장 영조를 설계가 불가능하다. 학교는 휴원을 위한 건이공장을 마련, 비록을 정비하고 유휴공간을 만들어 확보한다. (93년 3월 이전까지)
- 도서관 전신상변화를 제후하고 빠른 시일내에 전신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자치회와 협의한다.
—23층 서고를 개방화실로 운영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시기 등은 도서관 자치회와 협의한다.
2. 동물원 건립과 관련해
—동물원 건립은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학내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도 추진하여 마련한다.
3. 소규모로 공사와 동시에 소수준동과 테니스장의 정비(투수콘크리트 정비)를 추진한다. 정원정리의 개선은 구체적인 측정이 끝나면 대로 즉시 착공한다. (93년 상반기 예정)
4. 노년복지의 근본적 개선(누수방지 및 통풍)을 위한 거점방학에 실시한다.
5. 1)대학발전위원회를 92년 12월까지 구성한다.
그 구성은 위원장: 총장, 부위원장: 학생처장, 교수협의회: 2인, 직원: 2인, 학생회: 2인
대학발전위원회의는 교수, 직원, 학생의 소비할것 보호를 도모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회원의 복지증진과 교육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동위원회는 생활활동조항을 연구하고 93년 3월까지 외대 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한다.
2)92년 12월까지 여성동류 자립기를 학생회관, 도서관, 사관대 건물에 2대씩 나머지 건물은 1대씩 설치한다. 여학생위원회의가 문제를 담당한다.
3)92년 12월까지 자용대기기를 설치한다.
- 4)신규 제후에서 시간의 연장 문제는 학교와 신학자지위원회와 공동조사를 자료로 바탕으로 하여 신 학교와 유사한 조건(면적, 인력, 인력 수준으로 동등한 수준을 만드는)을 공동 노력하여 11월 30일까지 결정한다.
6. 외대내부 순환에는 현 4층 6층으로 증축하며, 총무처와 총학생회: 공동관리를 포함한 제한적 관리방안을 11월까지 마련 실시한다.
7. 동계개교행사는 92년 2학기부터 실시한다.
8. 취업정보전달에는 93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며 효율적인 취업업무 위임을 학생회의 기구를 93년도 1학기까지 확대 개편한다. 취업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등 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취업위원회에 협의한다.
9. 최측 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외대 구성원의 논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마련한다.
학자적위원회의는 93년 4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한다.
10. 학교는 총학생회와 협력하여 이거스가 11월까지 발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6. 32년 학생을 위한 대학을 강구하기 위하여 학교는 11월 중에 대학위원회를 마련하고 총학과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한다.

11일 협상안중 외발위구성 추가로 전격합의 합의안, 구체성 결여... 총학, 재단견인에 한계

서울캠퍼스 학생측의 21일 동안의 전전설거지거부 지난 11일(수) 이강희(법학과 교수) 총장, 원형근(이태리학과 교수) 학생처장, 박성남(시상·노아) 총학생회장 사이에 총 7개조항(외대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단기화지사업에 대한 합의와 조인이 이루어졌으며 13일(금) 학생측 수업이 전면 재개됐다.

합의안 도출 내역
11일(수) 저녁의 '인대비'으로 불려오는 이번 합의의 전적분과는 다음날(12일) 노년복지에서 총학생회측의 합의안 발표와 대충과장실 명으로 합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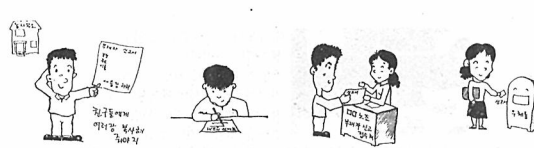
총학생회측은 14일(토)에도 각 학과 학내대표의상을 도입을 갖고 수업거부 기간동안의 평가를 가졌다. 하지만 참석이 저조한 것과 앞으로의 합의에 따른 대학당국

전진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리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합의안 조출에 대해 결말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이번 합의안의 전전내용이 '외대발전위원회'구성부분만을 제외하고는 1차협상안(본문 552호 1면쪽)에서 거의 전적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이는 1차협상안을 전제 학생들에게 제시하였을 당시 대부분의 여론이 이를 받아들일 것 같고 수업거부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을 표명, 그 후 일주일동안 수업거부가 계속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안의 문항이 1차협상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애초에 총학생회가 이를 조인 이후 전제 학생에게 발표한 것은 오히려라는 점이다.

사양에대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제학생부표

귀찮다고, 권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1)부재자 신고서 작성 및 발송



① 부재자신고서 수검(동사무소)

② 신고서 작성

③ 단체별 및 개인별 발송(주변동지서로)

2)부재자 투표방법



① 추진동독지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본인에게 배달됩니다.



② 지정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신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부재자 투표를 합시다

지난 3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부재자의 투표권이 100만표를 넘겼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100만 부재자의 참여여부는 대통령후보의 당락을 결정하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민주정부 수립은 부재자 투표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재자란 선거일(선거일) 당일에 투표하는 선거인 명부작성 완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난 사람으로 '선거당일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재자 투표는 일반투표일에 앞서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실시되며, 이를 위한 우편투표 용지는 12월 3~5일에 발송됩니다.

부재자 투표는 이번 선거별 개표로 구·시·군 또는 투표구선관위가 설치한 영외투표소에서 실시합니다.

단, 합법·오 등 불가피한 경우는 기관·시설인의 별도투표소에서 실시합니다.

*부재자 신고일은 11월 25일까지입니다.

공정정보 측구를 위한 언론감시단모집



“○○일보는 국민의 신문” “○○○는 국민의 방송, 국민과 함께하는 ○○○” 한결같이 신문이나 방송이 모두 “국민의” “국민”을 주장하지만 진정한 국민의 언론이 있습니까?

이제 언론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언론의 왜곡, 굴절된 현실을 바로 잡읍시다.

모집대상: 참언론을 바라보는 시민 학부생, 구니
활동내용: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도언론의 편향정보를 바로잡는 현실가능성 모든 실천활동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 언론 모니터링활동, 해곡 편파 불공정정보에 대한 항의전화, 항의방문, 대국 민홍보전등
모집기간: 수시로
일 정: 11월 25일경 결단식
이후 비디오 촬영, 언론 문제에 대한 강좌 및 토론회
간담회 시간이 발생시 6시간 또는 12시간이내에 모임수 있는 준비(미성년학생 구속)
문의및 접수: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336-16
전기도감시단대표의
(전화 365-0325/FAX 392-5289)

사설

대학 본연의 위상으로 다가서자

한없이 넓게 펼쳐진 대학 캠퍼스의 푸른 잔디위에 늦가을의 햇빛을 즐기며 독서에 여념이 없는 남녀 대학생들. 더없이 넓은 체육관 안에서 상기된 얼굴로 운동에 열중하고있는 젊은이들. 두 통한 교재를 열구리에 끼고 교석정원한 교내식 도시간 건물사이를 오가는 학생과 교수. 강의실 밖으로 흘러 나오는 교수분들의 커랑카랑한 목소리.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은채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교수연구실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불빛... 언젠가는 한국의 국제대학 교정에 이런 풍경이 정경 나타나게 될것인가?

그러나 오는 한국의 국제대학 교정은 이하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일것이다. 늦가을의 햇빛을 즐기며 독서에 여념이 없는 남녀 대학생들. 더없이 넓은 체육관 안에서 상기된 얼굴로 운동에 열중하고있는 젊은이들. 두 통한 교재를 열구리에 끼고 교석정원한 교내식 도시간 건물사이를 오가는 학생과 교수. 강의실 밖으로 흘러 나오는 교수분들의 커랑카랑한 목소리.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은채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교수연구실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불빛... 언젠가는 한국의 국제대학 교정에 이런 풍경이 정경 나타나게 될것인가?

무엇을 대학캠퍼스란 숙연한 분위기가 풍기는 학문의 도장이어야 할것인가? 최근 국제대학 교정은 가히 시장바닥을 방불케하는 부실, 무질서의 표본이 아닌가? 누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한국의 국제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모두가 이런 시장바닥처럼 한탄대단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미사실 설명이 필요치 않다.

우선 대학당국이나 학생들 모두가 명심해야 할것은 대학이란 원천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첫째, 대학이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도장이라는 점이다. 대학이 길잡이를 잃고 방황할때, 아니라 이념의 앞만은 앞만헤쳐, 젊은이들은 허공을 헤매게 되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사회는 조만간 कै의 길을 걷게될 뿐이다.

둘째, 대학이란 눈앞의 이익추구 보다는 숭고한 학문의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는 기업체가 아닌 육영기관이라는 점이다. 학문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모름지기 대학은 학문의 정다운 가치를 이해하는 자들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셋째, 대학은 기술자가 아닌 원만한 인격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심오한 학문의 정리가 아닌 막대한 학위취득 기술을 익히기 위해 대학문을 두드린 자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기술학교나 전문학교를 찾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것이다. 대학은 단언컨대 몇몇자만 인격이나 외국어 능력을 더 익히기 위해 존재할수는 없는 곳이다.

대학의 존재이유가 이러할때, 학생들은 강의라는 대학교육의 절대명제를 거부하는 어떠한 경향한 행위로써 해서는 안된다. 강의를 거부했다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대학교육을 부정할 것이나 다름없다. 대학에서 강의를 중단한다는 것은 살아 숨쉬던 인간이 호흡을 중단하는 것과 하등 다를바 없는 것이다.

한편 대학당국도 학생들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경영방식을 과감히 수정 또는 폐기해제라도 강행하는 총학대학으로서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할것이다. 급변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한국국제대학이란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가는 자들은 항상 외면하지 않았던가? 변화를 수용하는 자만이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젊은이들의 지식을 열정 그리고 기쁨을 위해 불사르는 믿음직한 외대인 원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없이 넓은 체육관에 부딪히고 자 하는것은 한국의국제대학교의 모든 학생들만이 자랑할 수 있는 외대인이라는 뿌듯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경쟁에서 앞서는 자(primum inter pares)만이 살아 남는다는 적자생존의 냉엄한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

글을 기다립니다

외대인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담긴 '흡산의 소리'는 작은 소리, 서툰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다. 더 많은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 대학일과에 대한 견의사항 또는 외대인이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은 목요일들 2~7개의 원고지에 담아보세요.

채택된 글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민주적으로 검증하여
주인의 자리를 찾고 싶다

—서울캠퍼스 피임실험과정에 대하여

10월 12일 목요일 최종 집회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자. 외대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예비들이 조직적으로 집회를 하였다. 그리고 총학생회는 감동적인 반원으로 일관하면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피하며, 합의를 통과시킨 후에, 집회를 정리하였다. 일요일 밤에 집에서 바깥 뉴스를 보는 데, 어느 회사의 노·사간 회합협상 타결 보도가 나왔다. 노조 집행부가 들고 나온 최종 협상안을 전체 찬·반 투표에 붙인 결과 62%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가장 민주적인 학교에서 우리의 최종 협상안이 총학생회와 중추위원회의 찬성으로 집회를 열어, 1·2학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단지 열광적인 박수 소리로 통과되었다는 현실이 나에게 실망을 안겨 준다. 합의안에 찬성하며 하나의 성과로 인정하는 학생들이 있다. 또한, 반대 의견에 서있는 학생들도 있다. 흘러 나온 얘기에 의하면 '물론, 집회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지만-이-무에서는 집회에서 질문도 받고 않고 투표도 하지 않고 통과시킨다는 내부적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한다.

흡산의 소리

□열악한 유동구조로 일본민화에 침소도어기는 우리민화

이 땅이 뉘 땅인데...

머칠런 서점에 갔다가 깜짝 놀란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일반 서점에 인 인이로고 받고 받아들이었다.

우리나라의 민화가 일본이나 프랑스 등의 민화선진국에 비해 뒤쳐져있는 원인의 하나가 대본소(민화) 위주의 유동구조라고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국내화들의 몇몇 작품들이 서점장대용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민화관련 잡지사나 출판사들이 앞다투어 어린이나 청소년층에 인기가 높은 일본이나 프랑스의 민화를 사들여오고 있는 것이다.

그 가격도한 3천원대여서 어린이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시리지를 살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인기를 끌고있는 일본민화, 선종적인 일본을 끌고있는 오라를 주제로 한 동종민화라는 이유로 난쟁이들이 팔리는 현실이다. 결국은 일본을 팔고자 하는 출판사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대본소 한 곳에 한 점을 갖다두고 수천명이 매번, 2배원래 대본소 하나를 유동구조로 하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믿고 들어오는 민화선진국들의 존재가 우리나라의 민화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벌써 그러한 영향을 받은 어린이 민화잡지에서 우리민화가 차지할 공간이 좁아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려할 수 있다. 우리민화로서의 특징과 민화의 교양적인 성격을 잃어버리고 일본민화의 외면적 경향을 좇아 그들을 흉내내는 문화의 사생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민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문제 또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무분별한 수입, 혹은 해박한 판로 판매에 있는 언저들과 이들의 수입기회를 나누는 관계기관의 각성이 필요할 때이다.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의 첫 출발점은 바로 학교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학교에서 지난 목요일, 누가 보아도 비민주적인 사태가 다수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실현되고 말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합의서와 수업료에 대해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인준 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검토한 다음 합의서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왜? 바로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광명 서양·노예2>

올바른 성의식에 의한
여성관 정립을 바란다

언론학과 여성학 소임 해방전에서는 황선 남대학우(남·210여: 217)를 대상으로 9월 19일 23시에 걸쳐 성, 사관, 결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①성별에 따른 남녀의 성격적 특성 ②대학내 솔직한 문화에 대한 의견 조사 ③배우자에 대한 의견 조사 ④성관계에 대한 의견 조사 ⑤결혼 성관계에 대한 의견 조사 ⑥결혼 가정에 대한 의견 조사로 세분화된다.

①성별에 따른 남녀의 성격적 특성은 학내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남·여 100명 중 남학생이 50명, 여학생이 50명이었다. 남학생은 50%가 솔직한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50%가 솔직한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50%가 솔직한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50%가 솔직한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대학내 솔직한 문화에 대한 의견 조사는 배우자에 대한 의견 조사 ④성관계에 대한 의견 조사 ⑤결혼 성관계에 대한 의견 조사 ⑥결혼 가정에 대한 의견 조사로 세분화된다.

③배우자에 대한 의견 조사는 배우자에 대한 의견 조사 ④성관계에 대한 의견 조사 ⑤결혼 성관계에 대한 의견 조사 ⑥결혼 가정에 대한 의견 조사로 세분화된다.

④성관계에 대한 의견 조사는 성관계에 대한 의견 조사 ⑤결혼 성관계에 대한 의견 조사 ⑥결혼 가정에 대한 의견 조사로 세분화된다.

⑤결혼 성관계에 대한 의견 조사는 결혼 성관계에 대한 의견 조사 ⑥결혼 가정에 대한 의견 조사로 세분화된다.

⑥결혼 가정에 대한 의견 조사는 결혼 가정에 대한 의견 조사로 세분화된다.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서점인 인문·철학』

좋은 기업, 그곳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SKMS.

SKMS (Sunkyoung Management System, 경영관리시스템)는 학문적, 이론적인 경영이론이 아니라 실제 기업경영을 통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골라 경영이론의 실용성에 이르기까지 실천적인 관점에서 개발된 경영관리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의 기업성능을 자율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 학원, 민간기업의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화공학을 전공한 신입사원
이태근씨가 요즘 친구들에게
경영학박사로 통하는 이유”

대학에서 경영이라는 단어로써 생소했던 화공학과 이태근씨 졸업후 유공 고분자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입사할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경영과 무관한 사람으로만 알고있었다. 하지만 신입사원

연수과정 많은 책자속에 담겨진 SKMS를 접하게 되면서 경영이라는 것이 이론속에 파묻혀있는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현실속에 생활하게 살아있는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조별토의와 강의응답 그리고 회상회의 대화를 통해 SKMS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해하게 되니 이러한 생각이 더욱 확신을 갖게되었고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자신은 바쁜 신입사원 모드를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는 말에 조금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흥미를 느낀 그가 요즘에는 대화중에 경영에 대한 나름의 논리를 곁들여 주위 친구들에게 경영학박사로 통하기까지 합니다.

SUNKYONG
鮮京그룹

◇윤금미씨 살해사건을 계기로 본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

돈주고 눈치보는 한미행정협정

국내 시설등 무상사용, 기지 설치지역 민중들 생계대책 없어 행정협정 체결 이후 정부가 재판권행사한 경우 0.7%에 불과

미군 범죄자들의

별첨지인 한국

최근 유언처럼 생애사건 뿐만 아니라, 이방에 미군이 주둔한 지 50여년 동안 미국은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

외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67년부터 87년까지 주한미군 범죄는 모두 3919건(매년 52건으로 범죄가 가담한 미군은 4만 5천백39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해마다 평균 2천2백명, 하루 평균 8건의 범죄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이렇듯 미군범죄가 극성을 부리며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중요 요인은 한미행정협정(SOFA)의 불평등성과 한국정부의 대미굴복적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겠다.

종전 직후인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한미행정협정 체결한 것을 규정하고 14년만인 1966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은 독소조항을 지니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행정협정 체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에 의해 대한 언급을 별로 없었다. 행정은 미국의 고지세와 한국정부의 비자무상으로 인해 미군이 주둔하지 겨우 16년만에 체결된 것인데, 그 내용도 매우 불평등한 형태로 체결된 것이다.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형사사법권에 관한 문제'이다. 이 조항에는 한국정부가 사건 발생 15일 이내에 재판권 행사를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재판권이 자결로 미국측에 넘어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미행정협정 제11조는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라도 0.7%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측에 양양되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우 52%, 일본의 32%, 필리핀의 21%에 비하면 비로한 수도 없을 만큼 낮은 비율이며, 그나마 불기소처분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재판권이 넘어온 미군범죄자에 대해 미국측은 지금까지 경정이나 본국송환 등의 미미한 제재를 가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미군 범죄자들에게는 한국 법의 무효(無法)가 통하는 별첨지인 인식에 왔으며, 이런 심리에 힘입어 미군 범죄자들은 자의에 따라 법을 무시하고 한국법정에 대한 개입요구는 원천적인 것

이며, 결국 24년 만인 지난해 1월 이 협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결과 한국정부는 미군의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갖게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범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보다도 재판권을 행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과연 확고한가에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정부는 시종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따름이다.

사건 직후 경찰은 마를 이영을 붙잡았으나 미군측의 신병 인도 요청에 따라 곧바로 미군

또한 이 조항에는 그 부지가 사유재산일 경우 한국정부가 보상을 하도록 못박고 있다. 행정 제14조 1항에는 '미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 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금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최대한의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다량의 물자가 무관세로 들어와 국내시장에 방출되는 데에 이 선진다. PX를 통해의 판매도 동으로 혜택을 받은 예수가 87년 한해만 해도 7

서 세균병과 출혈성 자루라 등의 파괴적 해를 끼치고 있다. 행정 제14조 1항에는 '미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 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금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최대한의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다량의 물자가 무관세로 들어와 국내시장에 방출되는 데에 이 선진다. PX를 통해의 판매도 동으로 혜택을 받은 예수가 87년 한해만 해도 7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을 해소하는 길은 한미민간의 애국심을 되찾는 민족주의의 실현뿐이다.

죽에 넘겨주었다. 한때 한미주주국 지위 협정 (한미 행정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 피의자를 제포한 한국 경찰이 먼저 피의자신상조사서 등 기조조사를 한 뒤 신병을 미군측에 넘겨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형사사법권에 관한 문제'이다. 이 조항에는 한국정부가 사건 발생 15일 이내에 재판권 행사를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재판권이 자결로 미국측에 넘어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미행정협정 제11조는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라도 0.7%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측에 양양되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우 52%, 일본의 32%, 필리핀의 21%에 비하면 비로한 수도 없을 만큼 낮은 비율이며, 그나마 불기소처분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재판권이 넘어온 미군범죄자에 대해 미국측은 지금까지 경정이나 본국송환 등의 미미한 제재를 가했을 뿐이다.

행정 제17조 2항에는 '고용주(미군당국)는 그들의 인원을 모집하고 고용하며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필요할 경우 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자의로 고용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실제로 부당해고당한 노동자는 연간 4백여명에 이를 정도로도 한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 행위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노동부에 회부하고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 다시 합동위원회의 회부되며 이때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그대로 구속력을 가진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노동원은 해고할 수 있다. 합동위에 안건이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은 모든 행정행위에 금지된다. 70일간의 기간이며 고용주는 갖가지 분할공격과 파괴공작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을 상상할 수 없다.

셋째, '동원과 관세 문제' 미군은 행정협정에 따라 한국에

선진 2백80만불 정도로 추산되는 것은 이 조항의 불평등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한미행정협정은 한미민간의 애국심을 전파하게 해주는 불평등조약의 대지이다. 어느 특정조항에 대한 수정에 의해 협정의 문제점이 극복되기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한 노동자는 연간 4백여명에 이를 정도로도 한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 행위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노동부에 회부하고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 다시 합동위원회의 회부되며 이때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그대로 구속력을 가진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노동원은 해고할 수 있다. 합동위에 안건이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은 모든 행정행위에 금지된다. 70일간의 기간이며 고용주는 갖가지 분할공격과 파괴공작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을 상상할 수 없다.

셋째, '동원과 관세 문제' 미군은 행정협정에 따라 한국에

3당의 대선공약 분석

반민주, 반민중적인 민자당의 정책

민자당의 정책이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현재의 정치체제, 통치기구, 반민주적 악법들에 대해 어떠한 정책들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체제, 통치기구, 반민주적 악법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자당 정책에는 국가보안법, 안기법, 집시법, 보안법, 청문회법 등 반민주악법에 대해 형식적 차원의 언급도 없다. 민자당은 정권인보의 도구로 변화한 경찰청과 검찰, 사법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이 '엄정한 법집행으로 민생치안에 주력하는 강력한 정부 실현(3항)'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6공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제정책에서도 민자당은 현재의 같은 대외의존적 제반구조의 경제정책, 정경유착을 계속 유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통원정에 대한 억압을 더욱 강화하리 하고있음을 확인한다.

민자당은 쌀수입단가를 주장하면서 '그반의 품목 최소시장 접근 및 국내생산성제를 경제수입제, 양질의 국내농산물을 최대한 생산하여 수입요약액제(31항)'라고 하여 농산물수입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유조각을 주축하여 농촌의 경제, 복지, 교육문제를 대항시도 해치고 사 및 전교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채, 오히려 '우유조각 확보법 제정(55)'을 제시하여 교사들을 경찰의 폭주카사로 만들려 하고 있다.

상당 부분 민주적이며서도 타협적이고 동요하는 민주당의 정책

민주당의 정책은 상당부분 민주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선거연령 18세로 인하(6항), 특별검정제 도입(8항), 경찰중립화를 위한 법적 제도의 장치화(11항), 1993년까지 금융



3당은 대선공약에 공통적으로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근본적인 개혁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민자당은 자의적인 수입감축정책의 추진 및 국보법등 제반 악법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반민중적 공약으로 비난받고 있다.

민자 노동법 개정등 민생문제언급없이 대외 수입개방 확대 내세워

민주 정치·민중생존권등은 민주개혁요방, 경제·군사는 여전히 대외의존적

국민 현실가능성 없는 경제공약·시장경제 우위 내세운 흡수통일 주장

발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8항)' '중소기업의 단계적 대외개방(9항)' '철도의 특성에 맞는 다량, 고속수송체계 구축, 공항시설 확충(13항)'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사전 보완조치 완벽하게 완수, 금융실명제 조기실시(21항)'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대외개방이 어떤 수 없으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미지 불보인 통원정에서도 여차피 개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고속전진, 영동고속도로 건설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규제 완화, 제정규제에 대한 규제 철폐는 투기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독과점가격을 형성시켜 가격상승을 선도하는 제벌에 난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현 경제문제의 주범인 재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책을 내세우려 하고 있다. '재벌의 상호출자의 상호지급보증을 억제하여 과도한 경쟁력 집중을 막겠다(30항)'라는 극히 미온적인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3권에 있어서도 '군인,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78항)' 한다고 노동2권만은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최정수준의 자국군비 확충(97항)', '북한과 평화공존체제의 구축된 때까지 주한미군의 계속된 유지(98항)', '군수확대 위기가 조성되면 군복(99항)'이라는 동맹국측, 자위성 확보에 우 선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한다기 보다 외세의 군부, 보수화한 정세에 지나치게 타협하라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경에서 벌어진 것으로 제발주의 경계한상을 시사시킬 것이다. 통원정의 신축적 운용도 상황을 봐서 통원정행동을 하자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되겠지만 물가는 올라갈 것이다.

국인당의 제발위원장을 대변한다고 있는 것은 통원정에서 극단적으로 부각된다. 국민당은 '경제인의 자율화제를 통한 경제개혁의 활성화로 2년내에 국민당의 통일 약속(34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통원정의 건설(35항)' '전환기의 안보태세 강화(36항)' 등을 민족자위대 명시적으로든 주장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정책적 지체, 흡수통일, 군사세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당은 국가보안법과 안기법, 집시법, 보안법, 청문회법 등 반민주악법에 대해 형식적 차원의 언급도 없다. 민자당은 정권인보의 도구로 변화한 경찰청과 검찰, 사법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이 '엄정한 법집행으로 민생치안에 주력하는 강력한 정부 실현(3항)'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6공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범죄와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제정책에서도 민자당은 현재의 같은 대외의존적 제반구조의 경제정책, 정경유착을 계속 유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특히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최정수준의 자국군비 확충(97항)', '북한과 평화공존체제의 구축된 때까지 주한미군의 계속된 유지(98항)', '군수확대 위기가 조성되면 군복(99항)'이라는 동맹국측, 자위성 확보에 우 선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한다기 보다 외세의 군부, 보수화한 정세에 지나치게 타협하라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경에서 벌어진 것으로 제발주의 경계한상을 시사시킬 것이다. 통원정의 신축적 운용도 상황을 봐서 통원정행동을 하자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되겠지만 물가는 올라갈 것이다.

국인당의 제발위원장을 대변한다고 있는 것은 통원정에서 극단적으로 부각된다. 국민당은 '경제인의 자율화제를 통한 경제개혁의 활성화로 2년내에 국민당의 통일 약속(34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통원정의 건설(35항)' '전환기의 안보태세 강화(36항)' 등을 민족자위대 명시적으로든 주장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정책적 지체, 흡수통일, 군사세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당은 국가보안법과 안기법, 집시법, 보안법, 청문회법 등 반민주악법에 대해 형식적 차원의 언급도 없다. 민자당은 정권인보의 도구로 변화한 경찰청과 검찰, 사법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이 '엄정한 법집행으로 민생치안에 주력하는 강력한 정부 실현(3항)'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6공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범죄와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제정책에서도 민자당은 현재의 같은 대외의존적 제반구조의 경제정책, 정경유착을 계속 유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특히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최정수준의 자국군비 확충(97항)', '북한과 평화공존체제의 구축된 때까지 주한미군의 계속된 유지(98항)', '군수확대 위기가 조성되면 군복(99항)'이라는 동맹국측, 자위성 확보에 우 선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한다기 보다 외세의 군부, 보수화한 정세에 지나치게 타협하라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경에서 벌어진 것으로 제발주의 경계한상을 시사시킬 것이다. 통원정의 신축적 운용도 상황을 봐서 통원정행동을 하자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되겠지만 물가는 올라갈 것이다.

국인당의 제발위원장을 대변한다고 있는 것은 통원정에서 극단적으로 부각된다. 국민당은 '경제인의 자율화제를 통한 경제개혁의 활성화로 2년내에 국민당의 통일 약속(34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통원정의 건설(35항)' '전환기의 안보태세 강화(36항)' 등을 민족자위대 명시적으로든 주장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정책적 지체, 흡수통일, 군사세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당은 국가보안법과 안기법, 집시법, 보안법, 청문회법 등 반민주악법에 대해 형식적 차원의 언급도 없다. 민자당은 정권인보의 도구로 변화한 경찰청과 검찰, 사법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이 '엄정한 법집행으로 민생치안에 주력하는 강력한 정부 실현(3항)'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6공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범죄와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제정책에서도 민자당은 현재의 같은 대외의존적 제반구조의 경제정책, 정경유착을 계속 유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특히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최정수준의 자국군비 확충(97항)', '북한과 평화공존체제의 구축된 때까지 주한미군의 계속된 유지(98항)', '군수확대 위기가 조성되면 군복(99항)'이라는 동맹국측, 자위성 확보에 우 선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한다기 보다 외세의 군부, 보수화한 정세에 지나치게 타협하라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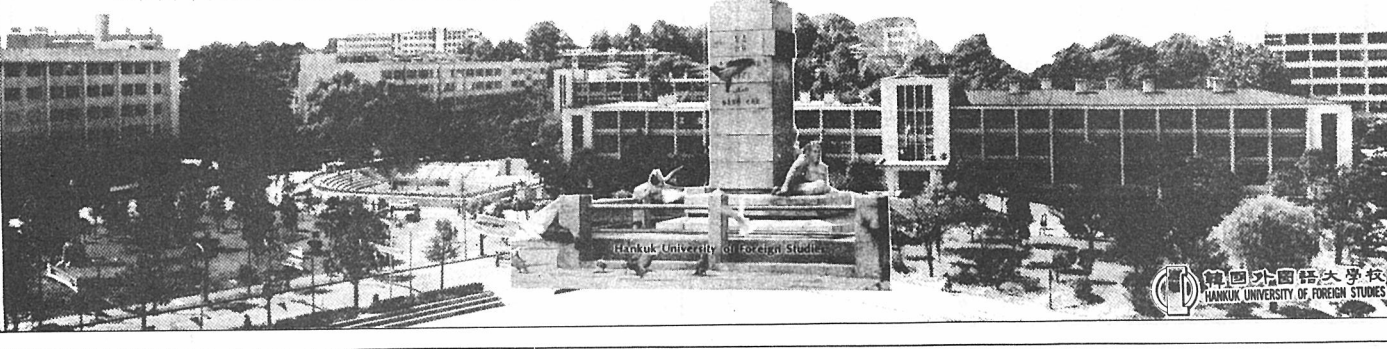
특히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최정수준의 자국군비 확충(97항)', '북한과 평화공존체제의 구축된 때까지 주한미군의 계속된 유지(98항)', '군수확대 위기가 조성되면 군복(99항)'이라는 동맹국측, 자위성 확보에 우 선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한다기 보다 외세의 군부, 보수화한 정세에 지나치게 타협하라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나 지금이나 외대인의 캠퍼스는 지구촌

전 세계24개 언어가 함께 생활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우리 외대는 외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폭넓은 학문을 탐구하는 개성있는 종합대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954년 국내 처음으로 외국어 전문 교육 대학으로 태어나 38년이 지난 오늘 온 세계 구석구석에서 합쳐져 오늘날을 만들어가는 외대인의 모습을 찾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를 호응하는 젊음, 실력을 두루익히 하지 않는 젊음이 만들어갈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캠퍼스는 바로 지구촌 전체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밝음의 배움터
동양관에 한국을 심는 주역을 양성하는
21세기 신개척자의 꿈과 이상이 숨쉬는
실력있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들의터
외국어 교육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더 나은 인간 삶의 창출
자연과의 대화, 이론과 실천을 겸한

- 서양어계열
- 동양어계열
- 통역어계열
- 법정계열
- 상경계열
- 사범계열
- 인문계열
- 자연계열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3896